

제210호 (2009. 6. 8)

■ 경제 동향

- 1/4분기 주택담보대출 7.6조원 증가

■ 정책·경영

- 국내 공공공사 기성 산정 및 지급 방법 개선 방안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면 개정

■ 정보 미당

- 산업간 임금 격차의 안정적 유지 현상에 대한 설명들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설 기술·관리자의 일자리

1/4분기 주택담보대출 7.6조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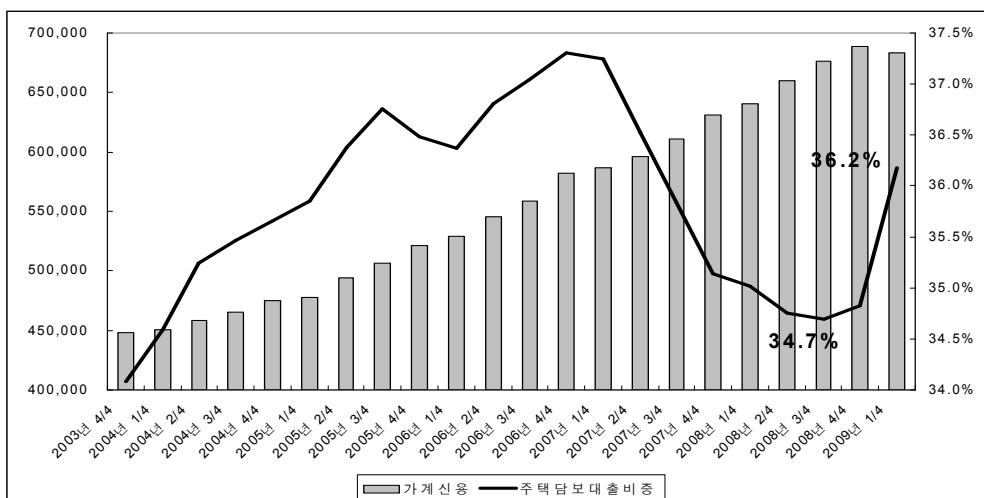
-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에 기인, 가계부채 구조조정 지원 필요 -

■ 1/4분기 가계신용잔액은 감소, 주택담보대출은 증가

-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신용잔액이 올 1/4분기 말 현재 683.7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0.7%(4조 5,935억원) 감소
 - 신용카드사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2009년 1/4분기 판매신용이 위축되었고 여신전문기관 및 신용협동기구의 대출이 감소함.
- 가계신용의 감소세와는 달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따라 7조 6,193억원이 증가함.
 - 주택담보대출 전체 규모는 2008년 4/4분기 239조 6,883억원이었던 것이 올 1/4분기 들어 247조 3,076억원으로 증가함.
 - 전체 가계신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6.2%로 상승
 - 주택용도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비율도 전분기에 비해 1.2%p(43.5% → 44.7%) 상승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으로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 비중은 하락함(36.2% → 33.4%).

가계신용 규모 및 주택담보대출 비중 추이

(단위 : 십억원, %)



자료 : 한국은행.

■ 가계신용 지표 악화 속 국지적 부동산시장 호황

-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주택가격 하락 등 가계신용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
 - 실업률은 2002년 이후 3%대를 유지하였으나, 올 3월 현재 4.0%까지 증가함.
 - 금융 위기 이후 최고점 대비 전국 아파트 가격 5.0%,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6.2%가 하락하여 자산 가치 감소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담보가치도 낮아짐.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최근 2년간은 0.5% 이하를 유지했으나 올 1월부터 0.7%대로 증가하였음.
- 올 1/4분기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증가는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및 저가 매물 수요에 따라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분기 동안 상승세로 돌아섰고 거래량 역시 3,396건으로 최근 2년 중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됨(국토해양부 신고분 실거래가 공개 거래량 기준).

■ 지속적 리스크 관리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 유도 절실

- 건전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원활한 구조조정이 요구됨.
 - 현재와 같은 실업률의 증가, 가처분 소득 하락, 자산가치 하락 등이 지속될 경우 가계 신용 부실화가 우려되며 이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일자리 확충과 소득 증가이지만 이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우므로 금융기관은 자율적으로 상환능력심사요건을 강화하고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부동산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계부채의 구조조정 간접 지원 필요
 -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인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은 부동산 매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계부채의 원활한 구조 조정 지원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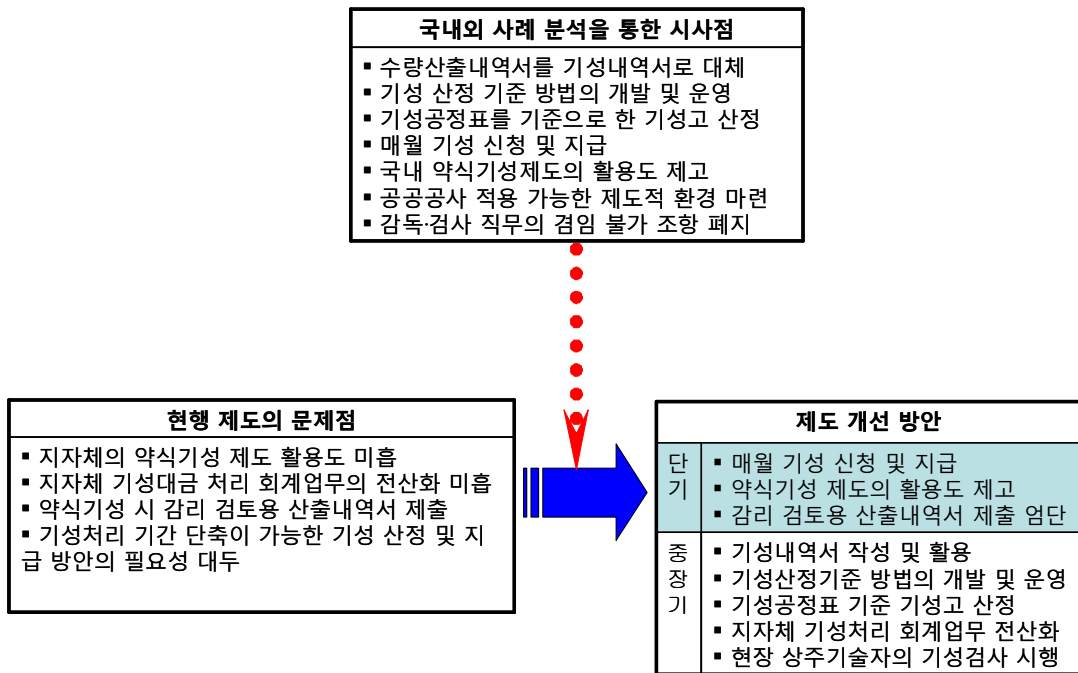
김현아(연구위원·hakim@cerik.re.kr)

허윤경(연구위원·ykhur@cerik.re.kr)

국내 공공공사 기성 산정 및 지급 방법 개선 방안

■ 기성 산정 및 지급 관련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적용을 공공공사 발주제도 운용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제거하여 계약자의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임.
- 기성 산정 및 지급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기성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시공 계약자의 비용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임.



<제도적 개선 방향>

■ 단기 개선 방안

- 약식기성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약식기성시 감리원이 요청하는 산출내역서의 제출을 방지한다면 시공 계약자의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 투입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임.

※ 본고는 '공공 건설현장의 기성 처리 방법 및 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서, 3회 연재 중 마지막 회임. 이번 호에서는 기성 산정 및 지급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게재함.

-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으나, 지자체 발주자나 현장 감리원이 변화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 필요
- 하도급 직불제를 입법 내용대로 공공공사에 전면적으로 적용한다면, 기성처리 업무 프로세스의 복잡화와 발주자 인력(감독관·감리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어나 기성검사 및 기성대금의 지급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함.
- 따라서, 하도급 직불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재고되어야 함.

■ 중장기 개선 방안

- 중앙정부가 공공공사의 기성 산정 및 지급 방안에 관한 정부 차원의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함.
 - 개별 공공기관별로 자체의 전략과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개별 프로젝트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과 계약일반조건 등을 개발하여 운영함.
 - 공공 발주기관은 시범사업(예로써, 설계·시공 일괄 공사)을 통해 준비한 개선 방안을 적용·검증한 후 그 적용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기성산정 및 지급방안의 중장기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함.
 - 산출내역서상 대표 공종의 기성물량을 검사하고, 이를 근간으로 한 기성관리용 예정 공정(률)표를 개발하여 약식기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도입
 - 국내 공공공사에서도 공사 진행과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현장 담당 기술자가 기성검사를 시행하도록 「국가계약법」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
 - 현장 품질검사와 기성 산정의 확인 절차를 통합하여 품질검사에 의해서 합격된 물량을 기성물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성 산정 방안을 수립
- 지자체 기성처리 회계업무의 전산화 업무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기성 지급 기간의 단축과 지자체 집행 예산의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음.

이영환(연구위원·yhlee@cerik.re.kr)

최석인(연구위원·sichoi@cerik.re.kr)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면 개정

■ 지경부, 엔지니어링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법 전면개정 착수

- 지식경제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5월 28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의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함.
 - 범정부적 엔지니어링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 및 향후 일정

개정 항목	개정 사유	주요 개정 내역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명 변경	엔지니어링산업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사업자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시책을 명확히 하고자 함.	법의 제명을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에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으로 변경
엔지니어링 관련 정의 규정의 정비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사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발주청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위한 법체계 확립(안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 산업/사업/사업자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산업을 “엔지니어링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을 “엔지니어링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 규정(안 제2조 제2호내지 제4호) ◦ 엔지니어링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안 제2조 제6호). ◦ 발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안 제2조 제7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엔지니어링 관련 정책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교육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수기관에서 추진되고 있어 범정부적 엔지니어링 종합시책 수립과 집행을 어렵게 하고 행정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부처간 정책조정 및 심의를 위한 기구 필요	엔지니어링기술개발과 보급,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사업화 촉진,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심의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엔지니어링산업발전 정책심의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설립지정 등	엔지니어링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환경조사, 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술 표준화, 시범사업 등의 기반 조성사업 추진이 필요하나 전문지원기관 부재로 사업추진 한계	엔지니어링기술 연구 개발과 이용보급, 기술표준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설립지정토록 함(안 제8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 등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지원시설 등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의 공동개발 및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기관, 대학, 사업자 상호간의 협력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 필요	일정 조건을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하고 동 진흥시설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하여 각종 조세 특례 및 부담금의 면제혜택 등을 부여(안 제18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엔지니어링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개발기술의 활용권고,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의 확충, 관련 산업과의 협력 촉진 및 민간의 지속적 투자 유발	엔지니어링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관련산업과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시장활성화 촉진을 위한 투자회사 설립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은 중소기업 위주의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은 기술개발 투자 미흡함. 따라서 엔지니어링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민간의 엔지니어링 신기술개발 투자 촉진 및 사업화를 위해 민관공동 투자재원 조성 필요	엔지니어링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엔지니어링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3조), 정부는 공공기관이 투자회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확보 및 지원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력 및 생산성의 향상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양성과 관리 및 육성에 달려 있으나 현행법은 엔지니어링 기술자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부재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자신의 근무경력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을 증명하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안 제32조)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사업자 사후관리 강화	엔지니어링사업자뿐만 아니라 실질적 위반자인 기술자 개인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규정 등을 통해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 부실을 예방	엔지니어링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성과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명의대여금지 및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안 제26조, 제27조, 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절차 정비	엔지니어링은 종합기술적 성격과 광범위한 업무범위로 인해 사업절차가 불명확하고 이로 인해 타당성조사, 설계 등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합리적 대가산정에 애로	기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달, 시운전, 관리 등 엔지니어링사업절차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시장 창출을 도모(안 제34조)

- 향후 6~7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검토를 거쳐 2009년 9월 국회에 제출하고자 함.
 - 동법이 「건설기술관리법」, 「기술사법」, 「환경관련법」 등과 관련된 부분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조율 여부가 시행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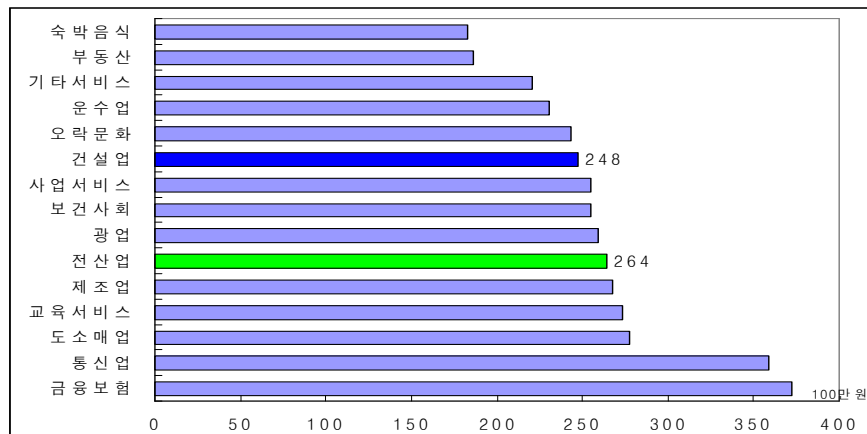
김민형(연구위원·mhkim@cerik.re.kr)

산업간 임금 격차의 안정적 유지 현상에 대한 설명들

■ 지난해 건설업 월평균 임금은 248만원으로 전체 산업에서 중하위 수준

- 건설업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248만원으로 전산업 평균 264만원의 93.8% 수준
 - 금융·보험·통신 분야가 높고, 숙박·음식·부동산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음.
- 우리나라에서 산업간 임금 격차는 시계열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노동의 질적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산업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략 95%선을 유지하고 있음.

<산업별 월평균 임금 수준 비교(2008년)>



자료 : 노동부, 사업체 임금 근로시간 조사

■ 산업간 상대적 임금 수준의 안정적 패턴

- 산업간 임금 수준에 관한 여러 연구를 보면 장기적으로 안정적 패턴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산업별 임금실태 조사에 의하면, 산업간 상대적 임금수준은 50~60년 동안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산업별 임금계수의 상관계수는 0.6으로 나타남.
 - 산업별 임금 패턴은 동일 직종에서도 안정적으로 나타나, 예를 들어 같은 경리직이라도 산업별로 일정한 갭이 계속 유지됨.
- 산업별 임금 패턴은 국제적으로도 유사하게 나타나,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14개국의 산업별 임금구조 간의 상관계수는 0.8로 나타남(Kruger 외, 1987).

■ 산업간 임금 격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에 대한 여러 설명들

-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높은 임금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보상일 수 있고, 또한 양질의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상정할 수 있음.
 - 하지만 여러 실증연구 결과, 근로조건의 차이나 근로자들의 질적 차이를 임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Akerlof 등).
 - 노동조건, 위험성 등 근로조건과 교육이나 경력, 나이, 인적자본 투입 등 노동의 질에 관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해 분석해도 산업간 임금격차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음.
- 산업의 임금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믿어지는 기업규모, 임금지불능력, 자본집중도, 노조 가입률 등 4가지 변수를 분석해 다음 같은 결론을 얻음(Brown, Dickens 등).
 - 작업장 규모가 큰 산업이 고임금 산업이 되는 경향이 있음. 다만 기업규모는 산업간 임금격차보다는 산업내 임금격차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익률은 산업간 임금격차(특히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 산업간 격차의 경우)를 설명해주는 주요한 변수임. 시장집중도와 임금수준 간의 관계는 혼재되어 나타남.
 - 자본집약적인 산업일수록 대체로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조 가입률이 높은 산업일수록 임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에서의 실증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본집약도와 시장집중도는 산업간 임금격차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윤율 및 기업규모, 노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임(박성준, 2001).
- 그 외 산업간 임금격차에 대한 여러 가설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음.
 - 평균 이상의 임금을 주고, 약간의 모니터링만을 사용하며, 태만이 발각되면 해고 등 강한 페널티를 주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태만방지모델’로서, 고임금 산업은 모니터링 비용이 크고, 태만에 의한 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일 가능성이 큼.
 - 높은 임금을 지불할수록 유능한 근로자가 모여든다는 ‘역선택모델’로서, 근로자의 자질 차이가 중요한 산업에서 많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
 - 근로자들은 자신이 공정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경쟁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지불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공정임금모델’로, 팀워크와 근로자 간의 협조가 중요한 산업일수록 고임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여러 설명 중에서 설득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 주요 정부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6.1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집합투자법 및 신탁업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6.2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강살리기사업 사업관리시스템 도입방안 검토회의에 이복남 연구위원 참여 ▪4대강살리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종합사업관리방향에 대한 자문 수행
6.3	국토연/산업연/에너지경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개발 연계 해외건설 진출 전략 워크샵'에 김민형 연구위원 참여 ▪제2주제 "플랜트 시장잠재력 변화와 자원개발 연계"의 토론자로 참여
6.4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인력기재과 4대강살리기 관련 준설 부산물 처리방안 자문회의에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준설토의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 경제전망 TF 회의에 이홍일 연구위원 참여 ▪각 연구기관별 전망 담당자 및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모여 하반기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등 논의
6.5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정책과 고용창출 관련 자문회의에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새벽인력시장 등 취업알선 지원대책 방안 등 논의

■ 신규 과제발령 현황

과제명	주요 내용
도급하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도급하한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도급하한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타당성 검토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공사에까지 도급하한제도가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타당성 검토 ▪도급하한제도의 적용방법 개선방안 연구 : 도급하한기준을 공동도급지분에 적용하는 방안 및 등급별 도급하한 방안의 타당성 검토 ▪도급하한 관련 개선방안 연구 등

■ 기타 연구원 활동현황

- 연구원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과정(2차)” 교육 실시
 - 연구원은 2009. 6.23(화) ~ 6.26(금) 총 4일간. 건설회관 9층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에서 건설업체 및 유관기관 등 민간투자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과정” 교육을 실시할 예정
 - 문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교육팀(Tel.3441-0691, 3441-0671, 3441-0848)

건설 기술·관리자의 일자리

국내외 경제 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고통이 확산되고 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크기가 늘어나는 만큼 과거처럼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최근의 일자리 감소 현상은 35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원인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국내 대학진학률에서 볼 수 있듯이 학력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클 것이다. 또,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업역의 변화도 고용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구조는 앞으로도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눈을 건설산업 내부로 돌려보자. 규모가 큰 기업군은 작은 규모에 비하여 정규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기업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연령층은 35~40세로 직급상 과차장급에 해당한다. 매출액 상위 100위 업체들의 직급별 구성도 과차장급이 44%인 반면 경력 3년 미만인 초급 기술자의 비중은 약 15% 안팎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건설기업의 직급 구조가 피라미드형이었다면 현재는 항아리형으로 중간관리자층이 훨씬 두텁다. 이러한 인력 구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기업의 역할과 선택에 달려 있다. 현재처럼 ‘원도급=시공관리’, ‘하도급=시공’이라는 등식이 유지된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업종업역 간 장벽이 허물어진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시공전문 기업으로 가야 생존과 성장이 가능하다. ‘웬만한’ 규모의 기업은 기술·관리직의 인력 구성비를 재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작은 기업은 생산활동에 투입하는 하부 인프라인력을 늘려야 한다. 글로벌 건설기업들의 인력 비중은 기술·관리직이 30% 이하이며 나머지는 기능직이다. 시장이 글로벌화될수록 기업들의 생산 활동폭이 넓어져야 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기술·관리직들의 눈높이다. 지방 소재의 소규모 기업에서는 대졸자를 어렵게 채용하더라도 근무 조건을 이유로 대부분 이직해버린다고 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들 대부분은 인력 채용시 5~7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반드시 요구한다. 생산관리 및 생산프로세스 관리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학교에서 가르친 생산 활동 지식을 곧바로 현장에서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없는 대졸자들을 채용하게 된다.

청년실업 증가 문제와 공과대학에서 과다 배출되는 인력을 사회와 학교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아야 하는 건설산업의 의무도 있다. 기업의 규모 및 업종별 역할 분담을 공론화시켜야 할 시점이다. 대학에서 어떤 전문지식을 가르쳐야 하는지 학교 측에 요구해야 할 때도 되었다. 개인의 선호도와 관계없이 수요자 그룹에서 일자리 방향을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인 현 상태를 건설산업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자. <건설경제, 2009. 5. 26>

이복남(연구위원·bnlee@cerik.re.kr)